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3-10호 | 2023년 3월 31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정태호 | idp.theminjoo.kr

바이든 부자증세와 윤석열 부자감세, 그리고 우리나라 세수펄크 징후

채 은 동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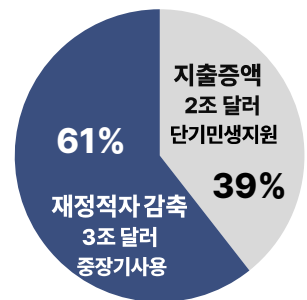
《 요약 》

■ 바이든 행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 7조 달러(8,950조 원) 확대재정

-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예산보다 8% 증액 cf. 윤석열 행정부 : 6% 감소

■ 부자증세 : 10년간 5조 달러(6,200조 원) ⇒ 사용 : (단기) 민생지원 (중장기) 적자감축

- 바이든 정부는 민생지원 및 적자감축을 위해 부자증세 발표
 - 억만장자세 도입 :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인 3만 명에 대해 매년 자산 증가분을 포함한 소득에 대해 최소 25% 과세
 - 고소득자 증세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7%→39.6%, 대상자 92만 명) 등
 - 법인 증세 : 법인세율 인상(21%→28%),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 2024년 : 3,160억 달러 증세 ⇒ 2,750억 달러(87%) 민생지원



부자증세 : 10년간 5조 달러

■ 윤석열 행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문제점

- 2023년 경기침체 예측에도 국세 10조 원 증가를 예상하고 부자감세(5년간 △60조 원) 추진
 - 3가지 감세기조(2022년 말 추진) : 고액부동산보유자, 초고소득법인, 고액주식보유자
- 문제점① : 긴축재정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가처분소득 감소에 대한 대응책 부족
- 문제점② : 예산안 편성 당시보다 2023년 경제성장률이 약 1%p 하락 예상
 - 성장률 하락은 세금감소 및 지출증가 * 미국 : 성장률 1%p 감소 ⇒ 재정적자 GDP 대비 0.12% 확대
- 문제점③ : 현실화되는 세입결손 징후 및 재정건전성 악화
 - 2월 국세 : 전년대비 총 15.7조 원 감소 주세, 종부세만 증가하고, 소득세 △6.0조 원(△19.7%), 부가세 △5.9조 원(△30.0%), 법인세 △0.7조 원(△17.1%) 등 나머지 세목의 국세수입 모두 감소
 - 법인세 감소 : 법인이익이 2022년 하반기 이후 감소 예) 삼성전자 : (상반기)28조 → (하반기)15조 원
 - 종부세 감소 : 세액의 기본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서울 △17.3%) 급감

▶ 키워드: 바이든 예산안, 부자증세, 세수결손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바이든 예산안 규모 : 7조 달러(8,950조 원)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6조 8,830억 달러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
 - 예산관리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따르면, 2024년도 대통령 예산안은 총수입 5조 360억 달러, 총지출 6조 8,830억 달러로 편성
 -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여 국가부채는 매년 꾸준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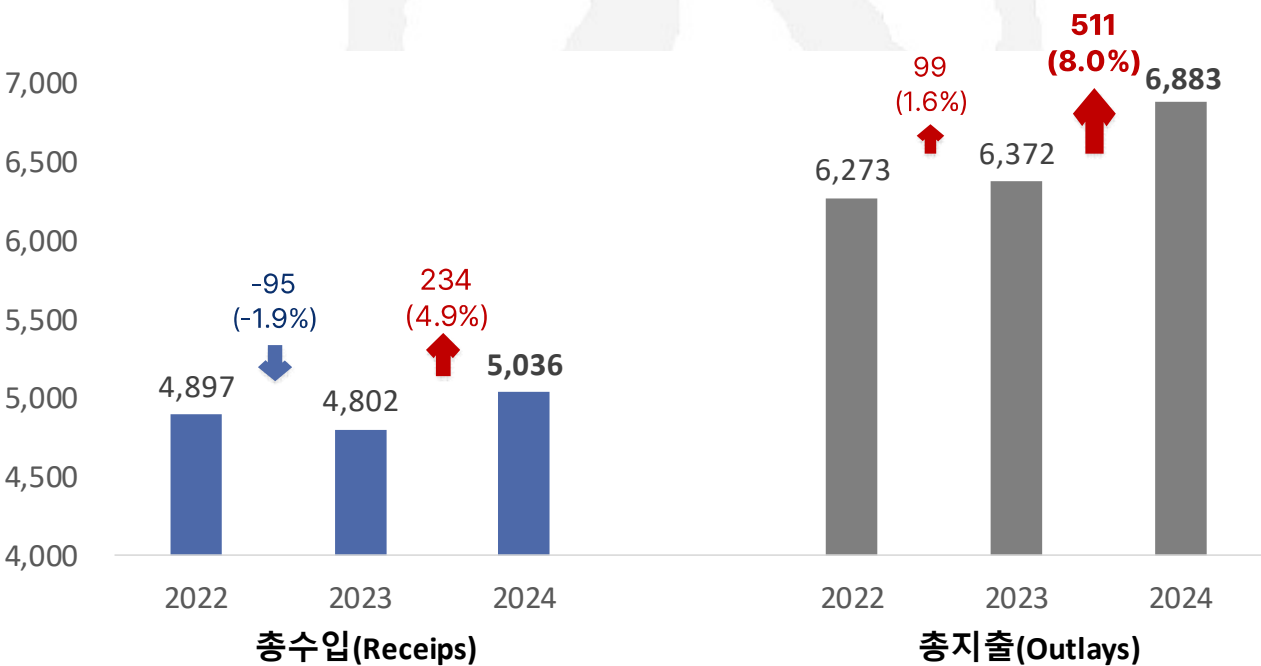
<표 1> 미국 바이든 행정부 예산안 : 2022-2033년 (단위: 10억 달러)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	2032	2033	24-33
총수입(Receipts)	4,897	4,802	5,036	5,419	5,773	6,080	...	7,601	7,991	65,187
총지출(Outlays)	6,273	6,372	6,883	7,091	7,294	7,589	...	9,472	10,026	82,242
재정적자(Deficit)	1,376	1,569	1,846	1,671	1,521	1,509	...	1,871	2,035	17,054
국가부채(Public Debt)	24,252	25,910	27,783	29,592	31,233	32,851	...	41,553	43,619	

주: 법률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전 2년치 예산과 이후 10년치 예산안 전망치를 함께 제출
 자료 : OMB,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Fiscal Year 2024", 2023.3.를 바탕으로 민주연구원 정리

-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예산 대비 8.0% 증가한 확대재정
 - 총지출 :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 증가율(8.0%)을 2023년 1.6%보다 5배 증가
 - 목표 : 서민·중산층 지원을 통한 경제성장률 회복(2022년 0.2% → 2023년 0.4% → 2024년 2.1%)
 - 총수입 : 2023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4년은 부가증세를 통해 4.9% 증가 편성

<그림 1> 미국 바이든 행정부 2024년도 예산안 : 2022-2024년 (단위: 10억 달러)



자료 : OMB,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Fiscal Year 2024", 2023.3.를 바탕으로 민주연구원 정리

2. 10년간 5조 달러(원화 6,200조 원) 증세안 제시

○ Growing the Economy for the Bottom Up and Middle Out

- Bottom Up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등을 강화
- Middle Out* :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경제가 선순환
 - *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제시. 낙수효과(대기업 → 중산층)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산층에 투자를 집중하여 소득을 늘리고 소비가 증가하여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개념
- 부자증세 및 서민·중산층 지원 등 패키지 정책을 제시

○ 현행 제도 유지 시(Baseline), 미국의 재정적자는 2024-2033년 10년간 20조 달러 누적 예상

- 미국은 현행 제도 유지 시 총수입, 총지출, 재정적자를 계산한 후, 정부 제안 제도에 따른 총수입, 총지출, 재정적자(Proposed Budget)를 계산. 양 수치의 차이가 변화된 정책효과
 - 우리나라 : 법률안 비용추계서(5년간 추정)는 기준선대비 효과로 계산되나, 예산은 전년대비 방식
- 기준선 예산에 따르면, 2024-2033년 동안 총수입과 총지출의 합계액은 각각 60조 달러, 80조 달러로 추정되며, 재정적자는 20조 달러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표 2> 미국 기준선 예산 : 2022-2033년

(단위: 10억 달러)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	2032	2033	24-33
총수입(Receipts)	4,897	4,650	4,721	4,910	5,305	5,647	...	7,060	7,418	60,478
총지출(Outlays)	6,273	6,376	6,584	6,808	7,103	7,382	...	9,342	9,954	80,389
재정적자(Deficit)	1,376	1,726	1,863	1,897	1,798	1,735	...	2,282	2,535	19,912

자료 : OMB,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Fiscal Year 2024", 2023.3.를 바탕으로 민주연구원 정리

○ 바이든 대통령은 극심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초부자, 고소득자, 법인에 대한 증세 제시

- 억만장자세 : 가계순자산이 1억 달러 이상 보유*한 0.01%가 과세대상
 - 연간 순자산의 가치상승분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25% 최소세율 적용
 - * 2021년 30,470명(Credit Suisse, Global Wealth Report 2022). 세계 억만장자 84,490명 중 36%
-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방안
 - 92.2만 명(2020년 실적치, 과세인원 대비 0.6%)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37% → 39.6%
 -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인상(39.6%) 및 공공의료보험료(메디케어) 인상(3.8% → 5.0%)
 - 장기주식 투자이득세율 인상 : 20% → 39.6%
 - ※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 서민·중산층 : 과세동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 법인 : 법인세율 인상(21% → 28%),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비용공제부인규칙** 등
 -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국외 자회사(예: 조세회피 지역 위치) 등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모기업의 거주지국(예: 미국)이 행사하는 제도
 - ** UTPR(UnderTaxed Payment Rule). 다국적기업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면서 모회사가 국외 자회사에 사용료 등을 지불한 경우, 국외 국세청이 자회사에 대해 손금불산입 형식으로 과세 강화

- 증세항목의 세입효과 : 2024년 3,160억 달러(410조 원), 2024~2033년 4.7조 달러(6,200조 원)
- 억만장자세, 고소득자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항목에 의해 2024년도 세입이 3,160억 달러 증가 예상
 - ※ 자녀장려금(CTC), 근로장려금(EITC) 등 중산층 가정 강화에 의해 총지출*이 2024년 2,469억 달러 증가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해 재원 사용
 - * 우리나라는 근로장려금 현금지급분 등을 모두 세입(마이너스 세입)으로만 집계하는 반면, 미국은 체납세금 상쇄분만 세입효과로 잡고 나머지 현금지급분은 총지출 효과로 집계

<표 3>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증세항목

(단위: 10억 달러)

	고자산가	고소득자			법인			전체 증세항목
	억만 장자세	최고세율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사업소득 과세강화	법인세율 인상	글로벌 최저한세	UTPR	
2024년 효과	0 (25년 44)	53	30	23	137	45	0 (25년 40)	316
10년 누적효과	437	235	344	306	1,326	493	549	4,742

주: 억만장자세, UTPR 등은 2024년 귀속소득을 바탕으로 2025년에 세수효과 발생

자료 : OMB, "Analytical Perspectives :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24", 2023.3.를 바탕으로 민주연구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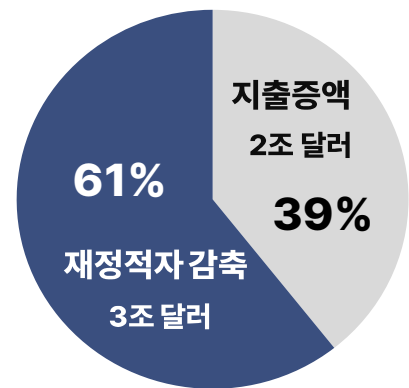
○ 부자증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 ⇒ (단기) 서민지원 (중장기) 3조 달러 재정적자 축소

- 2024년 : 증세를 통해 마련한 316억 달러에 대해, 공공주택, 공공의료, 대중교통 등 서민지원 예산과 국방비 예산을 증액하는 등 299억 달러 증액
- 2024~2033년 : 중장기적으로 증세액 누적분 4,709억 달러 중 39%인 1,853억 달러는 총지출 증액에 사용하고, 나머지 61%인 2,857억 달러는 재정적자 삭감에 사용
- ※ 미국 연방정부는 2023년 1월 국가부채 상한선(법률 사항, 31조 3,810억 달러)에 도달

<표 4> 바이든 행정부 예산안효과

(단위: 10억 달러)

	2024년		
	기준선(A)	예산안(B)	증감(B-A)
총수입(Receipts)	4,721	5,036	316
총지출(Outlays)	6,584	6,883	299
재정적자(Deficit)	1,863	1,846	-17
	2024-2033년 합계		
	기준선(A)	예산안(B)	증감(B-A)
총수입(Receipts)	60,478	65,187	4,709
총지출(Outlays)	80,389	82,242	1,853
재정적자(Deficit)	19,912	19,912	-2,857



부자증세: 10년간 5조 달러

자료 : OMB,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Fiscal Year 2024", 2023.3.를 바탕으로 민주연구원 정리

3. 서민·중산층 등 민생살리기 예산안

○ 분야별 예산효과를 살펴보면, 민생예산 중심으로 대규모 예산이 증액

- 세출은 기준선대비 재량지출 280억 달러, 의무지출 2,780억 달러, 순이자 △70억 달러 등 총 2,990억 달러가 증액
 - 우리나라는 전년예산 대비 변화분을 기준으로 하나, 미국은 기준선대비 변화분을 효과로 추정
- 지출 증액분 2,990억 달러 중 92.0%인 2,750억 달러가 기타 의무지출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항목에는 주로 서민·중산층 중심의 민생예산이 다수 포함
 - 자녀장려금(CTC) 전액 환급 등 확대(2,592억 달러), 무자녀 가구 근로장려금(EITC) 확대(139억 달러), 저소득 가정에 대한 에너지(41억 달러) 및 수도 지원 등

<표 5> 바이든 행정부의 분야별 기준선대비¹⁾ 예산효과 : 2022-2033년

(단위: 10억 달러)

	2024	2025	2026	2027	...	2032	2033	24-33
재량지출 Discretionary Programs	28	28	13	5	...	-99	-120	-311
국방 Defense	5	4	-5	-5	...	-56	-74	-211
비국방 Non-defense	23	24	18	10	...	-42	-46	-100
의무지출 Mandatory Programs	278	265	192	221	...	288	265	2,490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0	0	0	0	...	0	0	0
메디케어 Medicare	0	-1	-5	-13	...	-32	-74	-234
메디케이드 Medicaid	2	1	3	4	...	30	41	138
기타 의무지출 Others	275	265	194	229	...	290	298	2,587
순이자 Net interest	-7	-9	-15	-19	...	-60	-72	-326
전체효과 Total Effect	299	283	191	207	...	130	72	1,853

주: 1) 기준선(baseline) 대비 예산안(proposed budget)의 증감을 나타냄

2)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으며, 메디케이드는 65세 미만 저소득층 시민권자·영주권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자료 : OMB,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Fiscal Year 2024", 2023.3.를 바탕으로 민주연구원 정리

<표 6>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지출 증액항목 : 2022-2033년

(단위: 10억 달러)

	2024	2025	2026	2027	...	2032	2033	24-33
유자녀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	278	104	46	52	...	109	120	1,060
자녀장려금 전액환급 등 확대	260	75	8	9	...	13	14	429
무자녀 가구 근로장려금 확대	14	15	15	16	...	16	16	156
건강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구화)	-	-	15	20	...	22	23	165
보육, 주거, 교육, 건강 비용 지원	26	49	92	120	...	143	143	1,100
공공의료 강화 등	9	32	47	48	...	52	57	428
전체효과 Total Effect	299	283	191	207	...	130	72	1,853

주: 기준선 대비 예산안의 증액 항목

자료 : OMB,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Fiscal Year 2024", 2023.3.를 바탕으로 민주연구원 정리

4. 윤석열 행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비교

○ 바이든 행정부는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인플레이션에 따른 민생악화 등을 타개하기 위해 부자증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단기 민생예산 및 중장기 적자감축에 사용

- 전망 : 2023년 총수입 감소 등 세입 환경 악화 전망, 2023년 1월 국가부채 한도 도달
- 문제 :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 \Rightarrow 성장률 충격 \Rightarrow 개인소득 충격 \Rightarrow 총수입 충격 \Rightarrow 적자 확대
- 예산안 : 억만장자세, 고소득자 증세,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 \Rightarrow 민생예산 중심 확장재정

○ 윤석열 정부는 경제하락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 증가를 가정하고 부자감세를 추진

- 전망 : 2023년도 국세수입 전년대비 10조 원 증가 예상(자연증가분)
 - 국세수입예산 : 2022년 396.6조 원 \Rightarrow 2023년 400.5조 원(세법개정안 세수효과 Δ 6.4조 원 포함)
 - 2023년 기준선 국세수입 : 2022년 396.6조 원 \Rightarrow 2023년 406.9조 원 (+10.3조 원)
- 문제 : 추가적인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 \Rightarrow 성장률 충격 \Rightarrow 개인소득 충격
- 예산안 : 종합부동산세·대주주·법인세 감세 등 부자감세, 물가하락을 위해 긴축재정 편성

<표 7>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행정부의 예산안 차이

	바이든 행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윤석열 행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예산기조	확장재정	긴축재정
정책목표	서민·중산층 지원, 재정적자 삭감	물가하락, 재정적자 완화
예산규모	6.8조 달러 (GDP 대비 25.3%)	639조 원 (GDP 대비 28.0%)
예산증가율	전년예산 대비 8% 증가	전년추경예산 대비 6% 감소
총수입 충격 (기준선)	GDP 대비 총수입 비중 빠른 감소 예상 '22년 19.6% \Rightarrow '23년 17.7% \Rightarrow '24년 17.3%	국세수입 증가 예상 : 자연증가 10조 원 '22년 396.6조 원 \Rightarrow '406.9조 원
정책대안	3가지 부자증세 억만장자세, 부자증세, 법인세율 인상	3가지 부자감세 종부세 완화, 대주주 완화, 법인세율 인하
정책대안에 따른 세입효과	2024-2028년 5년간 +2.2조 달러 (10년간 +4.7조 달러)	2023-2027년 5년간 Δ 60조 원

주: 예산안 세입효과외의 경우, 미국은 기준선(baseline) 대비 세수효과인 반면 우리나라는 누적법임

자료 : OMB,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Fiscal Year 2024", 2023.3.,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2022.7.21.,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2022.10. 참조하여 민주연구원 정리

○ 미국은 성장률 감소에 따른 예산효과를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나, 우리나라는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대비하는 제도적 기반이 없음

- 미국은 성장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성장률 전망치 등 수치만 간략하게 발표
- 미국 OMB는 성장률 감소에 따른 총수입 감소, 총지출 증가 등의 재정 민간도 분석 결과, 성장

를 1%p 하락에 따라 총수입이 감소하고 총지출이 증가

- 2024년 이후 회복 시 적자확대 규모(억 달러) : 2023년 328, 2024년 564, 2023-33년 14,420
(GDP대비 규모, %p) (0.12) (0.21) (0.04)

<표 8> 미국의 2033년 성장률 1%p 변화에 따른 예산 민감도(Sensitivity) 분석 : 2022-2033년
(단위: 10억 달러)

	2023	2024	2025	2026	...	2032	2033	24-33
경제가 2024-2033년 회복할 경우, 재정적자 증가분	32.8	56.4	28.9	6.0	...	3.0	3.1	144.2
(GDP대비 효과, %p)	(0.12)	(0.21)	(0.10)	(0.02)	...	(0.01)	(0.01)	(0.04)
총수입(Receipts) 감소분	-19.3	-30.3	-15.4	-2.7	...	-0.2	-0.3	-69.2
총지출(Outlays) 증가분	13.5	26.1	13.4	3.4	...	2.8	2.8	74.9
후속 경제회복 없는 경우, 재정적자 증가분	32.8	71.8	81.5	87.6	...	130.7	138.9	1,079.2
(GDP대비 효과, %p)	(0.12)	(0.26)	(0.29)	(0.30)	...	(0.34)	(0.35)	(0.28)
총수입(Receipts) 감소분	-19.3	-40.2	-46.6	-49.1	...	-62.6	-65.3	-561.4
총지출(Outlays) 증가분	13.5	31.6	34.9	38.6	...	68.1	73.6	517.8

주: 경제위기가 항구적으로 발생하되 실업률에 영향이 없는 3번째 시나리오는 OMB(2023.3.) 13-14쪽 참조
자료 : OMB, "Analytical Perspectives :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24", 2023.3.
를 바탕으로 민주연구원 정리

5. 윤석열 예산의 문제점

○ 문제점① : 긴축재정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가처분소득 감소에 대한 대응책 부족

-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등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현 정부는 올해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여 대응책이 부족한 실정
- 더불어민주당은 긴급민생 프로젝트(30조 원 추경)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7조 2천억 원)을 제안했으나, 기획재정부는 물가자극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실정
- ※ 윤석열 행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670조 원 내외 규모 및 건정재정 기조 유지하겠다는 예산안 편성지침 발표(2023.3.28.)

○ 문제점② :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지출이 증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2023년 실질성장률이 예산안 편성 당시보다 약 1%p 감소할 것으로 모든 전문기관 예상

- 경제성장률 하락은 세입예산 감소, 지출 증액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총수입 측면 : 성장률 하락 ⇒ 개인소득 감소, 법인소득 감소, 소비 감소 ⇒ 국세수입 감소
 - 총지출 측면 : 성장률 하락 ⇒ 실업률 증가, 소득감소 ⇒ 실업급여 증가, 저소득지원 증가
- 우리나라 2023년 경제성장률이 예산 편성 시점보다 약 1%p 하락 예상
 - 예산안 편성 당시 성장률 전망치(기획재정부, '22.9월) : 경상 4.5%, 실질 2.5%¹⁾

1) 기획재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8.

- 실질성장률 전망치 : 한국은행²⁾(’23.2월) 1.6%, IMF³⁾(’23.1월) 1.7%, OECD⁴⁾(’23.3월) 1.6%
- 미국 민감도 추정치(0.12%p, 세입 -0.07%p, 세출 0.05%p)를 우리나라에 단순 적용하면, 세입 2조 원 감소, 세출 1조 원 증가 등 재정적자 약 3조 원 증가 발생 추정

○ 문제점③ : 현실화되는 세입결손 징후 및 재정건전성 문제

- 징후1 : 2023년 2월 국세수입 △15.7조 원

2023년 2월 누적 기준으로 주세, 종부세를 제외한 전 세목의 국세수입이 감소

- 전년대비 △15.7조 원 : 소득세 △6.0조 원, 부가세 △5.9조 원, 법인세 △0.7조 원, 주세* 5백억 원
- * 주세법시행령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막걸리(2.4%), 맥주(2.5%) 세율인상

- 2월 국세진도율 : (’23년) 13.5% < 17.7%(’22년)

※ 박근혜 행정부는 2012~2014년 3년 동안 세입결손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표 9> 2023년 2월 국세수입 세목별 현황

(단위: 조 원, %)

	2월 누적 세입				2월 진도율		
	2022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2022년	최근5년	2023년
소득세	30.4	24.4	△6.0	△19.7	23.6	20.7	18.5
법인세	4.1	3.4	△0.7	△17.1	4.0	3.8	3.2
부가가치세	19.8	13.9	△5.9	△30.0	24.3	22.1	16.7
상속증여세	1.9	1.6	△0.3	△15.1	12.9	13.0	9.3
개별소비세	1.7	1.7	△0.1	△4.5	18.6	18.4	16.2
증권거래세	1.5	0.8	△0.8	△49.0	24.4	21.2	15.8
교통에너지환경세	2.3	1.8	△0.5	△19.8	20.6	18.0	16.5
관세	1.8	1.2	△0.7	△36.3	17.6	17.8	10.8
주세	0.7	0.8	0.0	6.5	19.8	22.8	24.6
종합부동산세	0.1	0.2	0.0	3.7	2.1	7.5	2.6
기타세입	5.5	4.6	△0.9	△16.6	n/a	n/a	n/a
총 국세수입	70.0	54.2	△15.7	△22.5	17.7	16.9	13.5

주: 최근 5년 진도율은 최대 및 최소 연도를 제외한 절사평균 진도율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3.2월 국세수입 현황”, 2023.3.31.참고하여 민주연구원 정리

- 징후2 : 법인소득 감소

대기업의 순이익이 2022년 하반기 이후 감소하는 등 2023년 법인세액 감소 전망

- 2022년 상반기 기업실적을 바탕으로 정부는 2023년도 법인세를 편성했는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GS, SK하이닉스, 정유4사 등 주요 대기업의 실적이 2022년 하반기 이후 두드러지게 악화
⇒ 2022년 소득분의 2023년 3월 납부, 2023년 8월 중간예납 등에도 부정적 영향
- 법인세율 인하 및 횡재세 논의 등으로 인해 대기업은 법인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22년 이익을 2023년으로 처리하고, 2023년에 발생할 비용을 2022년으로 앞당기는 등의 회계처리 가능성

2)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3.2.

3)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grade』, 2023.1.

4)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2023.3.

※ 2023.3.30. 통과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세액공제율 인상 등의 세수감소(약 4-5조 원 추정)는 법인의 2023년도 법인소득을 신고하는 2024년 3월에 발생

<표 10> 주요 법인¹⁾의 순이익 및 법인세비용 : 2020~2022년

(단위: 조 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²⁾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삼성전자	36.3	53.4	46.4	29.5	16.9	9.9	13.4	-9.2 ³⁾
현대자동차	2.1	8.0	10.9	6.2	4.8	0.2	2.3	3.0
GS	0.5	2.9	4.6	2.7	1.9	0.6	1.2	2.1
POSCO홀딩스	2.0	9.4	4.0	4.8	-0.8	0.2	2.2	0.5
SK하이닉스	6.2	13.4	4.0	6.7	-2.7	1.5	3.8	1.8
정유 4사 ⁴⁾	-5.6	4.9	11.5	10.7	0.8	-1.5	1.5	3.3

주: 1) 연결재무제표 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비용임. 연결납세를 도입한 경우 모회사에서 자회사의 세금까지 함께 납부하므로, 기업집단에 소속된 대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다만, 개별 기업의 법인세비용은 재무제표를 통해 파악가능

2) 법인에서 추정한 기업회계 상 수치이고 지방소득세 법인분까지 포함. 국세청의 세무회계 상 법인세는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을 거치므로 실제 법인세와 회계상 법인세 간 일부 차이 발생 가능

3)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따르면, 당기법인세는 6.9조 원이나 이연법인세 △16.1조 원(주로 자회사 발생)이 발생하여 법인세비용이 △9.2조 원. 다만, 삼성전자 재무제표 상 2022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비용은 각각 29.7조 원, 4.3조 원임

4) 정유4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중 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실적치가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2022년 1/4-3/4분기 누적액을 사용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기업별 사업(반기)보고서를 참조하여 민주연구원 작성

- 징후3 : 종합부동산세액 감소

종부세의 바탕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기준으로 전국 △18.6%(서울 △17.3%, 경기 △22.3%) 하락해 큰 폭의 종부세액 감소 추정

-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이 2022년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2023년 종부세액 5조 7,133억 원 편성했으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역대 최대 하락
- 국회 심사과정에서 종부세액이 4,062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⁵⁾됐으나, 최종 수입예산안 미반영
- 2023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이 발표⁶⁾된 가운데 종부세액이 예산액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는 세수를 만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60% → 80% ,시행령)을 논의

○ 국민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른 시점이긴 하나 세입결손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국가재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

- 법인사업자, 자영업자, 일선의 세무행정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세입결손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
- 세입결손이 현실화되는 시점에는 세입을 조정하는 추가경정 필요

5)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1. 57쪽

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 2023.3.22

【참고자료】 미국의 예산편성과정

○ 미국 예산제도 특징

- 미국은 연방예산법률주의에 따라 세입과 세출 예산안 모두 법률 형태로 입법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세입 예산안만 법률 형태로 입법)
- 대통령 예산안을 중심으로 논의되지만, 예산편성은 하원(공화당 다수) 권한
- 상원(민주당 다수)과 하원을 예산안이 모두 통과해야 하므로, 양원을 조율하는 제도 존재
: 세출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 세입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

○ 다양한 예산안

- 대통령 예산안(President's Budget) : 대통령의 국정인식과 정책방향 파악 가능. 경제성장률 등 경제에 대한 기본 가정과 시나리오별 재정분석, 재정 전반에 10년치 추계 등 상세제공
- 대통령 중간수정안(MSR, Mid-Session Review) : 상하원 예산법안 의결 후, 경제상황 변화, 의회 추가입법 등을 반영하여 매년 7.15.까지 수정안 제출 가능
-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 : 상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전체 지출수준을 4.15.까지 채택

○ 미국 의회 예산 과정

- 2월 첫째 월요일까지(2월 6일) : 대통령, 예산안 제출
- 2월 15일 : 의회예산처(CBO), 예산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 대통령 예산안 제출 후 6주 이내 : 각 의회 위원회, 검토 및 추계를 예산위원회에 제출
- 4월 1일 : 상원 예산위원회, 공동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 보고
- 4월 15일 : 상하원, 공동 예산결의안 채택
- 5월 15일 : 하원, 연차세출 예산법안(annual appropriation bills) 심의 가능
- 6월 10일 : 하원 세출위원회, 최종 연차세출 승인법안 보고
- 6월 15일 : 의회, 조정입법(reconciliation bill)에 대한 조치 완료
- 6월 30일 : 상하원, 예산법안 의결 ⇒ 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
- 7월 15일 : 대통령, 예산안 중간수정안 제출 가능
- 10월 1일 : 회계연도 개시

○ 미국 의회 세법개정 과정

- 하원 세입위원회(the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 조세법률안(Bills) 입안
- 하원 본회의 : 논의, 의결. 통과 시 명칭 변경(Bill → Act)
- 상원 재무위원회(the Finance Committee) : 공청회(의견수렴)
- 상원 본회의 : 하원안을 바탕으로 수정, 의결
- 양원 합동위원회(JCT) : 하원안과 상원안이 다를 경우, 의견을 조정하여 한 개 법안으로 통일
- 상원, 하원 의결 ⇒ 대통령 서명